

우리 대학교육시장의 구조와 개방화 대책

박 정 원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민교협 교육개혁특위 위원

1. 들어가는 글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 논의는 1991년 UR 서비스 협상에서 교육부문이 의제로 포함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91년에서 1993년으로 이어지는 UR서비스 부문의 협상에서 금융·건설 부문 등 다른 부문에 가려져 커다란 주목을 끌지 못했던 교육서비스 부문은, 당시 우리나라가 개방 계획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1993년까지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국내 시장 개방 논의가 일단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시작될 차기 협상에서는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1993년 한미투자환경개선회의에서 미국에 대해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을 이미 약속한 상태이고, 현행 GATT 체제하에서 모든 회원국은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개방 약속은 모든 나라에 대한 개방 약속을 의미한다. 이미 정부에서는 UR협상의 결과에 관계 없이 교육시장 개방을 기정사실화하여 1995년부터는 학원시장을 개방하고 곧이어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도 개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 효과는 타 상품시장 개방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양측 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개방이 이루어져 외국 대학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유학비용의 부담없이 선진학문과 기술을 국내에서 습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국내에 진출한 외국 대학과의 경쟁은 우리 대학의 구태의연한 운영방식을 혁신케 하여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자극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해외진출이 보장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의 우수한 대학이 국내 대학교육시장에 진출할 경우에 우리가 입게 될 피해는 현실적이며

심각한 것이다.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일게 될 피해는 교육서비스 상품이 갖는 고유한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교육서비스 상품이 갖는 특성, 곧 일반 상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교육서비스 상품은 그 속에 고도의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민족이나 국가가 가진 고유한 정신적 유산과 전통의 세대간 이전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둘째, 소비량을 증가시킬수록(교육을 받을수록) 인간의 사고능력과 업무처리능력이 배가되며 소비에 의해 소진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의 두뇌 속에 축적되어 인적 자원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교육서비스 상품의 소비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국내 대학교육시장이 개방되어 국내 대학교육의 일정부분을 외국 대학이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적 가치가 내재된 교육서비스를 외국 대학으로부터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국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공급되어 문화 식민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외국 대학기관에 지출된 등록금 등의 교육비는 결국 우리 국민이 생산한 경제적 가치이며, 이의 자국으로의 송금은 경제잉여의 해외유출을 의미한다.

셋째,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대학은 교육서비스가 지닌 정신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육 서비스가 순 상업주의적 관점에서 생산되고 공급될 것이다. 이는 다시 국내 대학을 자극하여 국내의 대학교육 전체가 상업적 품조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학 시장개방이 가져올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전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최근 일부 교육학자들을 중심으로 교육시장개방이

물고 온 피해와 그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정신이다.”는 식의 접근(호소?)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시장개방에 대한 대책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교육에 내재된 고도의 정신적 가치를 강조한 것이긴 하지만(그래서 나쁠 것은 없다. 우리나라 대학의 파행상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더 일찍부터 강조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조차 든다.) 이는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오히려 은폐시킬 뿐이다. 상품이란 오로지 이윤 획득을 위해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것이라 인식 태도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품화시키며, 또 상품화되는 것만이 질적으로 개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 각국은 이미 자본의 논리를 내세워 교육시장 개방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이를 정신이라고만 한다면, 마치 대포로 공격해오는 적 앞에 코란을 들고 나서는 것과 같을 것이다. 따라서 수요·공급 등 시장구조에 대한 이해없이 대학교육 시장개방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육 서비스 시장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대학교육 시장개방에 따른 정부의 대책과 그 문제점을 살펴본 후 나름대로의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대학교육 서비스 시장의 구조와 특징

교육서비스 상품의 수요자는 물론 국민 개개인(학생 및 학부모)이다. 수요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차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 비용(등록금 등 교육비와 교육기간중 취업을 했다면 벌 수 있는 소

득)과 졸업후 생애동안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의 크기, 즉 교육투자의 수익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력간 임금 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다.

교육서비스 상품의 공급주체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독일 등의 나라에서 공급의 주체는 국가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국가가 모든 교육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수요자인 국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 그러나 영·미 그리고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국가가 모든 학교 교육을 전적으로 공급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개인이나 법인이 사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서비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커서 국가가 공급하는 교육서비스와 시장에서 경쟁한다. 철저하게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이들 국가들이 UR 교육서비스 부문 협상에서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다.

우리나라에 대해 대학교육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이나 일본, EU 국가들은 모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로서 근대적 서구 학문의 발상지이거나 이를 일찍 받아들여 상당한 정도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들은 우수한 연구시설과 교수진을 갖추고 최첨단의 학문을 가르치고 있어 매년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몰리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육 부문에 대한 중복·과잉투자 현상이 나타나 이들 나라의 교육기관은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사립에서 주립 등 공립으로 전환하는 대학이 계속 늘고 있다. 자국내에서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자국 대학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겨냥하고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국내 대학교육 시장 진출의 가능성 여부는 우리나라 대학교육 서비스 시장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우리나라 대학교육 시장의 구조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시장 규모가 방대하며 시장이 만성적 초과 수요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의 전문대 이상 교육기

관의 직접 교육비 총계는 1990년 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4조 1천7백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중 외국 대학의 공략대상이 되는 사부담 직접 교육비는 약 3조 2천5백억 원이나 된다. 1992년 현재 127개의 4년제 대학에 약 110만 명이 달하는 학생이 재학중에 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 시장의 규모가 이처럼 확대된 것은 그 동안의 경제개발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자기성취욕구 증대나 남녀 차별의식의 퇴조에 따른 여성의 대학 진학률 증가 등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가 과도한 학력중시사회라는 데에 있다. 입사, 각종시험 및 승진 등에서 학력 차별이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학력간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엄청난 교육비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지 아니할 수 없다. 매년 높은 대학 입시 경쟁률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교육 시장을 만성적 초과 수요 상태로 만들고 있다.

둘째, 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고 교육내용이 부실하다. 교육서비스 공급의 주체인 정부와 사학재단의 투자기피로 인하여 사립대학은 물론 국·공립대학마저 교육 기본시설 확보면에서나 지원 시설 및 교수 확보율 등에서 모두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형편이다. 그간 많은 사학재단들은 교육이 갖는 공익성을 외면한 채 대학을 무분별한 이윤추구의 시장으로만 인식하여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천민자본적으로 학부모 수탈에 전력해 왔다. 또다른 공급주체인 정부 역시 사립대학 운영을 완전히 사학 재단에 일임하여 사립대학이 갖는 재정적 어려움을 외면해 왔다. 최근 수년간 정부에서 사립대학에 지원한 국고보조가 연간 학교 운영 경비의 1% 내외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국민교육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생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급한 수준의 교육 서비스가 공급되어도 공급부족의 시장

장 구조 하에서 소비자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서구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복제한 상품이 공급되고 있다. 교육 서비스는 일반 상품과 달리 민족이나 국가의 정신적·문화적 유산을 계승하고 있는 고차원의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에는 우리만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언어교육 영역을 비롯한 대학교육의 거의 전 영역에서 소위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보강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 역시 외국의 대학이 더욱 쉽게 우리 대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줌과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는 외국 대학교육에 대한 선망을 부채질한다.

넷째, 지역별 대학별 교육서비스의 차별성이 없다. 많은 수의 대학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심한 지역간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에 있는 대학들조차도 교육내용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과 대동소이한 것이어서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 경제 사회 구조상의 특징이 교육내용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대학별 교육내용의 특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소위 1류, 2류, 3류라는 대학간 계층 분화가 고착되었다. 이는 다시 외국 대학이 국내 어느 지역에서나 진출가능한 조건을 형성해 주고 있으며 소위 중·하위권 대학은 버틸 능력이 전무하다.

다섯째, 대학발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가 온존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대학교육 정책이 없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대학 입시 정책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학교 교육에서부터 고등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유일한 목표는 대학진학이며, 대학 입학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미명 하에 사립학교 재단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등 교육악법이 온존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조직은 관료화되고 부패하여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적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서비스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교육 서비스 시장의 특징은 만성적인 초과 수요의 존재, 공급자의 횡포와 이에 따른 상품 질의 저하, 교육 서비스의 대학별·지역별 무차별성, 법과 제도의 낙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쟁력의 약화로 시장이 개방될 경우 순식간에 선진 각국의 대학들에 의해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3. 대학교육 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문제점

대학교육시장의 개방과 이에 따른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은 민족의 문화적 가치를 상당부분 상실시킬 것이며 동시에 경제적 가치의 해외유출을 초래할 것이 틀림없다. 세계경제가 EU, NAFTA 등으로 지역화·블럭화되고 있고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안이하게 받아들여 전면적인 국제화·개방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업부문 소수 독점제벌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부문이 개방되고 있으며 대학교육 서비스 시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대학교육시장은 개방이 약속되어 있는 상태이며 정책당국 역시 시장 개방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시장 개방과 관련한 교육부의 대책은 매우 단순하다. 대학설립인가기준 예고제를 실시하여 부실한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진출을 제한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설립학교의 규모·지역·투자지원 등의 사전공고에 의한 학교 설립계획 신청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의 평가절차를 둔다고 되어 있다(교육부 국회교육위원회 현안 보고, 1993. 12. 15). 이 중 구체화된 것은 설립투자제한 규모에 의한 제한인데 4년제 대학은 1,202억 원, 개방대학은 375억 원, 전문대학은 203억 원(학교부지 제외)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은 교육부가 대학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거의 무지 내지는 무대책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첫째, 교육부의 대책은 외국 대학의 진출형태를 '신규설립'으로만 인식하는 데에서 나온 것으로 다양한 진출 형태에 따른 대책이라 할 수 없다. 물론 가장 일반적인 진출 형태는 대학을 신설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일시에 교지, 건물 등 시설 투자 비용이 많아 단독 투자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되므로 오히려 기피할 가능성이 많은 방식이다. 분교의 설치나 학위공동인정제(이미 고려대와 미국 아메리카대가 이러한 형식의 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학연수 등을 통한 국내 대학과의 연결 체제 등의 방식이 오히려 외국대학이 선호할 방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말 강의 제도를 통한 수석과정의 운영이나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과정 및 최고경영자과정 설치를 통한 교외학위 제도 역시 손쉽게 국내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형식이다. 이외에도 통신교육을 통한 진출이나, 특히 기존의 부실 국내 대학을 인수하여 진출하는 방식도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 또한 교육부의 대책은 투자 규모를 초과하는 외국 대학은 부실한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판단이 전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학의 규모가 대학의 질적 상태를 담보한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다.

둘째,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제시 없이 대학시장 개방을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1993~94년을 개방준비단계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개방에 따른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

킬 것이라 한다. 그러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관련 법령의 정비내용은 1993년 11월 국회에서 의결한 교육법 개정내용 중 '국제교육 및 국제교육협력'의 장을 신설한 것이 거의 전부이다. 이러한 법령의 제정은 우리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과 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개선의지가 전체되어야 한다.

셋째,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없다. 앞에서 강조한 바 있지만 교육서비스는 일반상품과는 달리 고도의 민족적 문화와 정신을 담지하고 있는 상품이다. 외국 대학의 진출과 그들에 의한 교육서비스의 공급은 결국 우리 민족정신의 파괴와 함께 외국문화의 무분별한 침투를 야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또한 상업주의적 교육풍토의 조성을 우려하면서도 현재 자행되고 있는 우리 교육풍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어 과연 정부가 진정으로 이 문제를 고려하는가 의심케 한다.

넷째, 민주주의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내부의사의 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의 공급주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사학재단이고, 수요자는 결국 전 국민이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대학교육시장의 개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기구나 통로가 없다. 현 정부가 30년간의 군사정권을 청산하고 들어선 '문민정부'라면 대학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들의 의견조차 들어보지 않은 채 시장개방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이로 인해 입게 될 민족 전체의 피해는 '백년'에 걸쳐 민족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이 될 것이다.

4. 대학교육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

대학교육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수요와 공급 양자의 조절을 포함하는 정책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해보겠다.

외국의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진출을 추진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국민의 높은 대학교육 수요와 비대한 시장 규모에 있다. 한 나라 국민들의 대학교육 수요가 높다는 것은 국민의 지적 수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나 양질의 노동인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모두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구태여 대학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는 직종 또는 사람에까지 이를 요구하는 것은 한 나라 인적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며 고급 노동력의 저급화 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에 대한 가수요는 조절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학력간 임금 격차가 개선되어야 하며 입사 및 각종 시험 등에서의 학력간 차별이 전면 철폐되어야 한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교육 투자년수가 길어져도 그에 따른 수익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교육 투자년수가 길수록 수익률이 체증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를 조절함으로써 대학교육이 갖는 전인교육적 성격이나 왜곡된 대학의 이념을 바로 세우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감한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사부담 교육비를 줄여 나가는 것도 시장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수요조절을 통한 시장 구조의 조정에는 많은 시간과 전 사회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반면, 단기적으로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은 공급측 사정을 조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급측의 문제점으로는 교육시설 투자의 빈약, 일부 사학재단

의 천민자본적 수탈 행태 및 이로 인한 부실한 교육내용, 그리고 공급되는 교육서비스의 차별성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교육시설 투자의 주체는 정부와 사학재단이다. 사학재단은 공교육 투자가 부족한 우리나라 대학교육 현실에서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양성과 학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바가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교육이 갖는 공익성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이런 점을 악용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여 대학교육을 저급한 상품 시장으로 전락시킨 사학재단 역시 적지 않다. 이들은 교육시설 투자는 뒷전인 채 금품입학, 부정 편입학, 공금횡령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우리 교육을 낙후시키고 사립학교법의 개악을 주도하여 대학을 병영화시켜 나갔다. 재단의 권한 강화는 교수들의 교권 약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박탈로 이어져 대학교육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교육내용의 부실화 현상을 초래했다.

전근대적인 사학재단의 횡포로 인해 민족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고 계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교육 부문은, 공개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대기업 부문보다 더욱 부패한 부문으로 인식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크게 저하되었다. 재단의 횡포를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는 사립학교법을 올바로 개정함으로써 대학의 다른 주체인 교수들의 자율성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교수강의평가제 등을 실시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부패한 재단은 과감히 국·공립대학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이는 사교육시장 규모를 축소시키는 의미도 있다.) 국·공립대학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부는 교육재정의 획기적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직접 수혜자인 기업도 교육투자에 기여함이 없이 그 과실만을 얻는 '무임승차자'여서는 안

〈표〉 우리나라 대학교육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개혁 대책

구 분		특 징	형성원인	대 책	정책방향
수요측면		만성적 초과수요 존재	과도한 학력간 임금격차, 입사·승진 등에서의 학력차별	학력간 임금격차 해소, 학력차별 철폐	과열입시 해소, 시장규모 축소
공급측면	대학교육환경	열악한 교육환경, 저급한 교육 내용	교육재정 빈약, 사학재단의 무분별한 영리 추구	교육재정 확충, 부패한 사학재단의 국·공립화	교육개혁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교육서비스의 내용	대학간 특성이 없음(단일 품목 대량생산 체제)	서구교육의 모방·복제	대학별·지역별 특화체제 갖춘(다품목 소량 생산 체제)	
	대학조직의 문제	열악한 교권·학습권, 조직의 비효율성	사학재단의 천민 자본적 성격, 대학 조직의 관료주의화	사립학교법 등 교육악법 개정, 교수상의평가제 전면 실시	

된다. 우리 대학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도 최대한의 시설투자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 서비스의 공급기관인 각 대학들도 일대 혁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사이에, 또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일부 신학대학 등 제외) 간에 공급되는 상품의 내용이 무차별하다. 대동소이한 교과목 구성과 전공교수 구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서로 구별되지 않는 유사한 내용의 교육 상품이 공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소위 명문대학과 중하위권 대학이라는 고질적인 대학간 계층분화가 야기되었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대학별 교육내용의 특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 대학 전체가 단일품종 대량생산 형식의 교육서비스를 공급해 왔다면 이젠 다품종 소량생산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에 있는 대학은 그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부문에 걸쳐 기본적인 지식을 구비할 수 있는 교육서

비스를 공급함으로써 대전·충남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기업이나 관공서 등의 대졸자 수요를 겨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수도권 소재 조선공학과 등의 학과는 부산이나 울산 등지로, 임학과·임산가공과 등은 강원도나 충북 소재 대학으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교육혁신과 산학협동을 이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대학별·지역별 특화를 통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위에 간단한 표로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 서비스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우리 대학이 대외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기 전에 UR 차기 협상이 개시될 것이고 우리로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대학교육시장이 개방될지 모른다. 전 교육주체들의 공동대책기구 수립을 통한 대응과 함께 범국민적인 여론조성 작업이 시급하다 하겠다. ▣